

‘국내파트’ 존폐 논쟁 불붙을까 사그라들까

정치권 ‘국정원 개혁’ 변수되나

與, 방첩·對테러 활동 강화 野, 개혁론 동력 소진 우려

협의입증 실패땀 여권 ‘색깔론 역풍’ 정치적 타격 직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에 비유하며 혐의로 국가정보원의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정치권의 현안인 국정원 개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수사를 주도한 국정원 국내파트는 정치권이 주장해온 국정원 개혁의 최대 쟁점이었기 때문이다. 여야는 그동안 국정원 개혁의 원칙에는 동의한 채 국정원 국내파트의 역할과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보였던 것이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국내파트의 정치 관여 소지를 없애되 방첩·대(對)테러 활동은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국내파트를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때문에 이번 사태의 향배는 정치권의 국정원 개혁 방향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이 만약 이 의원의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를 입증한다면 국내방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민주당이 요구해온 강도 높은 국정원 개혁의 동력에 힘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국정원이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나

오는 국정원 국내파트 개혁 주장을 허물기 위해 적절한 때를 살피다가 국정원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이석기 사태’는 일단은 새누리당에 유리한 상황으로 보인

다.

새누리당의 핵심 당직자는 29일 “종북 좌파가 이렇게 정치권에서 자연스럽게 활동하는 것 아니냐”라며 “당연히 국정원의 국내파트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이번 사건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아가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과제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자칫 국정원 개혁 논

의가 탄력을 잃을까 우려하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국정원의 근본적인 환골탈태가 이뤄져야 하는데 국정원이 이번 사건을 개혁의 저항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 요구 수위가 다소 낮아지는 절충 가능성도 제기한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자는 강경론과 국가보안법상 범죄로 수사권을 제한하자는 온건론이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국정원이 이 의원 등

에 대한 혐의 입증에 실패한다면, 국정원은 물론 여권 전체는 가능할 수 없는 정치적 타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전체가 ‘의도적으로 색깔론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했다’는 비판 속에 위기에 직면할 개연성이 큰 것이다.

이 경우, 국정원 개혁론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인 만큼,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아예 국내파트를 없애야 한다는 논리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국정원 수사대상에 오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진보당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를 마치고 의원회관으로 이동하기 위해 회의실을 나서 취재진의 질문에 크게 손짓하며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석기 등 ‘내란음모’ 혐의, 적용 가능한가

물증 확보 목적 입증 핵심

전문가들, 신중 접근 강조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진보인사 10여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적용한 혐의인 ‘내란음모’는 30여년 만에 등장해 유사한 전례가 거의 없다. 형법 전문가들은 내란죄가 형법상 최고 범죄인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90조는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죄로 구분하는데 국토를 잠점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내란)할 목적으로 음모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한 혐의다. 일반적인 형법이론상 ‘예비’는 범행도구 준비, 장소 물색 및 당사 등 물적 준비를 이터며 ‘음모’는 도모할 공범을 찾거나 모으는 인적 준비해 해당한다.

국정원 등을 통해 현재까지 알려진 혐의 사실은 지난 5월 서울 마포무합정동 모처에서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경찰서, 지구대, 무기저장소 등 국가기간시설 타격을 모의했다는 내용이다.

국정원은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는 등의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유죄 입증이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내란죄, 내란음모죄가 적용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단순히 ‘총기를 준비하라’고 말했다는 것만으로는 적용할 수 없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친구와 농담삼아 ‘한탕하자’고 한 것도 음모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이 없다면 단순 농담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며 “범행 대상지나 실행계획서와 같은 물증을 확보해 목적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죄는 형법상 최고의 범죄인 만큼 적용하기 쉽지 않다.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변광호법률사무소 변광호 변호사도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혐의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고를 탈취하라”는 내용을 두고 국헌을 문란하려는 의도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내란죄는 목적범인 만큼 그 목적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1980년대 학원가 주체사상의 대부분이었던 김영환씨는 이날 이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의혹에 대해 “그쪽 계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보다 더 낮은 수위의 얘기도 3~4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하지 않는다”며 “운동권 상식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씨는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한 말이라면 지나가는 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 의원이 경기동부연합의 모임에서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기동부연합과 통합진보당의 성향을 보면 이들이 내란 모의를 활발한 개연성은 있다”면서도 맥락을 따져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진보당 “허위날조·공안탄압” 반박...총력투쟁 선언

당 조직 ‘투쟁본부’ 전환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은 29일 자당 인사들에 대한 국정원의 내란예비음모 혐의의 수사에 대해 ‘허위날조’라고 강력 반발했다. 나아가 당 조직 전체를 ‘투쟁본부’로 전환, 총력 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전날 국정원의 압수수색 때 잠적했던 이석기 의원을 당 지도부의 대책회의에

직접 참석,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일진불사의 자세를 보였다.

진보당은 이날 오전 8시30분부터 국회에서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진보당은 이어 ‘긴급 입장 발표문’을 통해 “청와대와 국정원이 진보당에 대해 회대의 조작극을 벌였다”면서 “국정원 수사는 이 의원을 겨냥해 진보세력을 고립·말살 시키고 진보당을 해산시키려는 정치 모

략이자 민주시민을 두려움에 떨게 해 촛불을 꺼뜨리려는 공안탄압”이라고 맹비난했다.

진보당은 발표문에서 “총기준비 등 국정원의 주장은 그야말로 허위날조이자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진보당은 광기 어린 민주 말살에 민주주의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당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전국 16개 시·도당과 177개 지역위원회를 모두 비상체제로 운영

해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겠다고 선언했다. 또 “당력을 총동원해 ‘촛불’을 더욱 키워나가고 촛불 시민과 어깨를 걸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이어 오후 3시 청와대 입구 청문동사무소 앞에서 안동섭 사무총장과 시·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의 천안공노할 내란날조, 진보당 말살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보당 소속 김미희 김재연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의원이 올해 5월 초 경기동부연합 내부회의에 참여해 이른바 ‘적기가’를 합창했고 RO(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에 가입돼있다고 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의 허위보도”라며 관련 언론사와 해당 기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거리두는 민주당

진보당 참여 부산 촛불집회 불참키로

민주당이 ‘이석기 사태’ 후 통합진보당과 ‘거리 두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장 진보당이 참가하는 촛불집회에 불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종북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싶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은 30일 부산에서 시민단체 주도로 열리는 촛불집회에 당 차원의 불참은 물론 의원들에게 참여 자체를 권고하기로 했다. 향후 집회 참여 여부도 국정원의 수사 등 추이

를 지켜보며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의 (보고 대화와 촛불 집회에 대해) 큰 틀에서는 입장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보고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보당)의 참석 여부는 자율적이지만 조심스럽게 여러 가지 구호에 대한 염려들은 있다”며 당 내의 우려 분위기를 전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2013년 10월 0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메디컬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문흥, 일곡, 각화, 용봉지구의
전과목 메디컬타운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와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항문외과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 · 분양 문의 : 062)252-0099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렌터타운

상업·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